

시민배심원단 회의 전격 무산 돼 50여개 제조업체 회의 불참선언



격한 유가 상승 등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심야 전력 수용가에 내선 공사를 단행했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심야기기 제조허가를 남발하면서 관련 설비 생산업체가 크게 늘어 나고 영세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한 심야기기 생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

다. 전력 이용의 효율성과 기저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때 적극 권장되던 심야전력이 제약을 받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심야전력이란 전력 수요가 적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전력을 난방과 온수 축열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뜻하는 데 한때 정부와 한전측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하지만 심야전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축소되면서 관련 설비 생산업체와 시공업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97년 IMF 사태에 직면한 이후 정부는 급

심야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변압기 등 관련 시설 증설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한전측이 심야기기 관련업체에 대한 안전검사 등 규제를 강화했고 특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심야전력 요금을 9.7%를 올렸고 대규모 사업장이나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난방용 심야전력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심야전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



고 수요처도 제한하면서 사용자들은 물론 심야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약 50여개 업체와 전국 3000여 판매 대리점들이 갑작스런 규제와 수요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적극적으로 장려되던 심야전력기기가 제약을 받으면서 정부의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을 신뢰하고 심야전력기기 생산에 뛰어든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봉착해있다”고 말했다.

설비시공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이 확대되면서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보일러설비업계는 심야전력기기마저 위축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푸념이 커지고 있다.

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설치돼 있

는 심야기기만도 10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수요처들이 제한되면 관련 업계나 설비시공업계의 경영난이 커지고 결국 사후관리소홀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야전력의 순기능을 더욱 부각시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보일러설비협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전력 사용은 기저부하 조성으로 부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력 부하율은 지난 1985년 69%에서 2005년에는 76.2%로 개선됐는데 이중 심야전력 기여도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하율 개선에 따른 투자비 감소 효과가 1%당 137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000억원대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심야전력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수요를 제한할 경우 하계 전력 피크로 증설되는 전력 설비의 분산에 차질을 빚게 돼 장기적으로는 잉여 전력이 남아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심야전력이 농촌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8일 대성에너지, 귀뚜라미보일러, 경동나비엔등 20여개 심야전기기기 제조업체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31일 개최될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배심원단회의'에 전격 불참할것을 협의하고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문서화해 지속위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성에너지 안지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민배심원단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시민배심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심야전기 제도를 논의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학계 관계자들로만 구성돼 시민배심원이라는 이름이 모호하다"라며 "이같은 구성원은 결국 심야전기제도를 폐지하려고만 하는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행위'라고 일축했다.

또한 "환경운동을 펼치는 녹색연합이 참가한 배경도 모호할뿐 아니라 회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도 심야전기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



해서는 전면 무시하고 민주적인 회의의 절차만을 보여주려는 지속위의 얕은 속셈"이라면서 "약 50여개정도의 심야전기기기 제조업체는 이같은 지속위의 행태를 두고볼수 없어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31과 6월 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시민배심원단회의'는 제조업체측이 불참해 폐지를 찬성하는 쪽만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